

타이 남부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

인권의 관점*

박은홍**

I. 문제의 제기

퍼니발(Furnivall 1967)이 ‘복합사회’(plural society)라고 명명하였듯이 동남아시아 사회는 여러 종족, 언어, 종교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정치적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¹⁾ 타이 역시 대표적인 복합사회로서 타이족 이외에 무슬림, 중국인, 인도인, 고산족들을 비롯하여 몬족, 크메르족, 라오족, 말레이족 등이 공존하고 있다. 그동안 타이족들은 소수민족들과 비교적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많은 학자들은 타이의 각기 다른 개체들을 끓여 본래의 성질이나 모양과 다른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용광로에 비유하였다. 타이 사회가 새로운 사실이나 문화, 또는 문명을 적대시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절충시켜 새로운 타이의 것으로 만드는 포용적인 사회라는 의미였다(김영애 2000: 79).

그러나 이러한 타이의 신화는 깨지고 말았다. 2004년 1월 4일 새벽 2시 경 타이 남부 무슬림 지역인 나라티왓 내 군부대가 습격당하면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79-BS0069).

**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eunpark5@chol.com.

1) ‘복합사회’의 갈등은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다수주의(majoritarianism)와 이로부터 소외된 소수자 보호주의(minority protectionism)의 대립을 의미한다(박은홍 2004: 269).

서 4명의 불교도 군인이 피살되고 400여정의 총기가 탈취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에 계엄령이 내려진 이래 종족 간 갈등 양상을 보이는 폭력사태로 인한 사망자만 해도 2004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2천명을 넘어섰다.²⁾ 심지어는 폭력사태 관련자로 연행되어 경찰로부터 고문피해를 입은 말레이 무슬림들을 변호하던 무슬림 인권변호사가 실종되었다. 2004년 4월 28일에는 팻따니, 알라, 송클라 지역에서 100여명의 청년들이 산개해서 경찰, 군 초서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들 중 32명이 이슬람 성지이자 유적지인 크르 세 사원으로 피신하였는데 정부군이 로켓포를 발포하여 이들 모두를 살해하였다. 이날 발생한 ‘소요’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100여명의 무슬림이 사망하고 17명이 체포되었다. 물론 군과 경찰도 피해를 입었다. 같은 해 10월 25일에는 마찬가지로 남부 나라티왓 주 딱바이 지역에서 정부군이 비무장 무슬림 시위대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7명을 사살한 뒤, 시위 현장에 있던 1200여명에 이르는 주민을 군부대로 압송해가는 도중에 79명을 죽게했다. 이른바 ‘딱바이 참사’이다. 크르 세 학살사건과 딱바이 참사는 그동안의 관용과 포용의 타이 이미지에 결정적인 흠집을 냈다.³⁾

특히 ‘딱바이 참사’를 계기로 140여명의 대학교수들이 참사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관련자 처벌, 타이 남부지역 내 공안 요원의 활동 자제, 남부지역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 평화적 수단을 통한 문제해결 등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탁신총리에게 보냈다. 국가화해위원회는 바로 탁신정부가 이들 지식인들의 문제의식을 수용함으로써 구성된 것이다.⁴⁾

2) 타이 남부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ntellectual Deep South Watch의 홈페이지인 <http://www.deepsouthwatch.org>를 참조하기 바란다.

3) 2005년 8월에는 131명의 말레이계 무슬림들이 말레이시아와의 접경지역인 나라티왓에서 말레이시아 북부 끝단만으로 도피, 말레이시아 당국의 보호를 요청함으로써 집단적인 정치적 난민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타이 남부문제는 인권을 중시하는 시민사회 조직(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과 현지 주민조직(CO, Community Organization)에 의해 주요한 사회적 의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었다.⁵⁾ 이들은 남부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로 통합과 동화의 관점에서 접근한 정부, 의회 등 제도권력의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1997년 헌법 중 자결권(right to self-determination)을 중시한 조항에 주목하였다.⁶⁾

타이에서 ‘싯티’, 즉 권리 개념은 전통적으로는 공공선을 위한 질서 수호 차원에서 신민(臣民)에 대한 국왕의 통치권을 의미했다. 20세기 초에 들어와 노예제와 강제노역제의 폐지와 함께 국왕과 지배 계급에 한정되었던 권리개념은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력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부르주아지의 도전에 직면하였다. 역사적 전환점이었던 1932년 입헌혁명 이후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싯티’는 ‘성공’(क्व쌌랫)과 ‘정당한 권력’(암낫 칩 탐)을 의미했다. 정치적 자유화와 경제적 번영이 진행되었던 1980년대에 ‘싯티’의 의미는 보다 확장되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어떤 일들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권한을

4) 국가화해위원회는 시민사회와 남부 무슬림사회를 망라하는 민-관 협력기구로서 2005년 3월에 출범하였고, 의장, 부의장을 포함해서 타이 남부지역 대표 17명, 남부 외 시민사회 대표 12명, 정부를 포함해 야당, 상원의원 등 정치권으로부터 7명, 안보와 개발관련 공무원 12명 등 총 50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5) 남부사태를 인권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시민사회조직으로는 포럼-아시아(Forum-Asia), 민중민주주의캠페인(CPD, Campaign for Popular Democracy), 타이무슬림조직협회, 타이무슬림변호사협회, 시민자유연맹(UCL, Union for Civil Liberty), 평화를 위한 정의실행그룹 등이 있다. 최근에는 남부문제에 전념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인민역량강화(Peoples Empowerment)란 시민사회 조직이 출범하였다. 반면 현지 주민 네트워크 강화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조직으로는 수자원권을 위해 투쟁하는 영세어부들 조직, 희생자 가족들의 심리치료 봉사를 하고 있는 여성조직들이 있다.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타이변호사협회, 비폭력전략연구소, 기타 학술기관 및 종교기관이 남부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에 참여하였다.

6) 1997년 헌법은 인민의 의무를 규정한 제 4장 78조에서 지방의 경제, 기간시설, 정보 등 여러 독자적인 사안에 대한 독립적인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의미하게 되었다(Thanet 1998: 163-164). 물론 이러한 ‘싯티’ 개념의 확장은 타이에서 민주화와 그에 따른 시민사회의 성장과 깊은 관계가 있다. 특히 정치적 전제주의의 해체 과정은 무슬림 사회와 같은 소수자 집단의 권리 의식을 높였다(Chaiwat 2005).

이 글은 민주화에 따른 인권 의식의 확장 과정에서 주목을 받게 된 소수자 권리문제에 해당하는 타이 남부문제의 기원과 구조, 그리고 이에 대한 타이 시민사회의 대응을 인권의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⁷⁾ 타이 남부문제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위해서는 일국적 수준의 내부동학(internal national-level dynamics)을 중심에 두면서도 전 지구적 수준의 외부동학(external global-level dynamics) 모두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논문은 주로 내부 동학에 초점을 둘 것이며, 특히 남부문제의 누적 경로와 이것의 해결을 위한 타이 시민사회 중심의 관계망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II. 분석틀의 모색: 시민사회, 인권, 그리고 자결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시민사회는 비정부기구(NGO), 권리옹호단체(advocacy groups)와 다양한 사회운동을 지칭하며 분배정의, 종족, 종교 및 성 차별, 환경파괴, 거버넌스(governance), 민주화와 민주주의, 인권 등과 같은 이슈에 관여하면서 신망을 얻었다(Caballero-Anthony 2006). 일반적으로 시민사회 개념은 규범적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지만 구상과 실행에 있어서 많은 유용성을 또한 갖고 있다(Lewis 2001).

7) 타이의 소수민족들은 크게 4개 집단으로 구분된다. 첫째, 라오스 및 미얀마와의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아카, 라후, 리수, 메오, 야오, 카렌, 라와 등과 같은 고산족. 둘째, 타이 동북부 이산 지방의 라오족. 셋째, 화인(華人). 넷째, 무슬림(조흥국 1994: 63).

물론 시민사회 개념이 동남아시아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 지역 인민들이 권력을 상대로 민주적 권리와 결사·집회·참여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투쟁은 식민지 시대 이래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구적 맥락 속에서의 시민사회 개념과 경험을 동남아시아에 단순 적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지역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시민사회를 그 지역 고유의 문화, 가치와 배치되는 서구적 개념으로 간주하는 시각의 경우 시민들의 정치 참여, 권리옹호형 CSO와 사회운동을 국가의 통제 하에 놓여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를 다룬 적지 않은 문헌들은 종족성이나 종교를 시민사회 형성의 장애요인이거나 위협요인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필리핀의 경우 마르코스 독재 붕괴 과정에서 교회는 시민사회 내 윤리적 중심이었다(Carroll 2004: 75).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슬람 자매(SIS: Sisters In Islam) 등과 같은 무슬림 시민사회조직이 국내보안법(ISA) 폐지를 위한 행동에 참여하고 있다(Lai 2004: 126). 무슬림 출신의 지식인으로서 타이 남부문제 해결에 깊이 관여하였던 차이왓의 경우 정치적, 법적 틀 내에서 정체성, 권리, 그리고 의무를 선택할 수 있는 시민이 없다면 시민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Chaiwat 2005). 이때의 시민사회는 국가를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조직(NGO)의 집합이자 개인과 국가의 매개자이다. 말레이시아 시민사회문제를 다루는 대표적인 무슬림 지식인 안와르 역시 시민사회를 자율적이면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다양한 형태의 시민행동의 집합이자 국가와 대비되는 민주주의의 조건으로서의 기본 가치에 해당하는 자유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Anwar 2005). 그렇다면 소수종족의 자결권과 시민사회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우선 시민사회는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이때의 민주주의는 인민의 참여와 선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공정성과 자결권을 핵심 원리

로 하며(Jones 1994), 이때의 소수종족의 자결권운동은 더 많은 지방분권과 자율성을 요구하는 종족운동으로 표현된다(Loh et al. 2006: 7). 이러한 배경 하에서 탄생한 내부식민주의(internal colonialism) 이론은 국가가 중심부의 경제개발을 위해 주변부를 희생시키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종족-지역의식(ethno-regional consciousness)이 고양되면서 종족-지역 자치운동이 촉진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Brown 1994: 158-159; 조흥국 2004: 209). 이때 NGO들은 여성, 노조결성권을 박탈당한 노동자, 무토지 농민, 도시 빈민 이외에도 원주민 등과 같은 차별받는 주변집단의 인권을 옹호한다(Loh 2006: 43).

여기에서 인권으로서의 자결권은 서구 제국주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인종주의적 지배나 외세의 지배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그동안 국제정치에서 자결권은 영토보전(territorial integrity)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접근은 소수민족에 대한 다수민족의 탄압을 방치하여 분리주의 분쟁을 야기했으며, 국가폭력과 대량 인권침해를 불러일으켜 국가간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프리먼 2005: 169).

소수민족의 자결권 문제를 상징하는 러시아 목각인형 ‘마트료시카의 문제’⁸⁾에 대한 인권의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프리먼 2005: 169-172). 첫 번째로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여기에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분리독립 이외 다른 해결책이 없을 때에만 분리독립의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치료이론(remedial theory)과, 어떤 정치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개인은 누구나 떠날 권리를 갖는 것처럼 어떤 국가의 영토 내 한 지역에서 대다수가 분리독립을 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할 권리를 지닌다고 보는 자발성이론(voluntarist theory)이 있다.⁹⁾ 자발성이론은 소수민족문제가 수직적 갈등의 단계

8) ‘마트료시카의 문제’란 중첩되어 있는 민족문제를 러시아의 목각인형 마트료시카에 비유한 표현이다.

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직면할 수 있는 수평적 갈등의 단계에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¹⁰⁾ 특히 어떤 사회 안에 집단 논리에 동조하지 않는 개인이나 종교적, 문화적 소수자가 있을 경우 그 사회의 지배 엘리트가 소위 전통적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탄압할 수 있음에 유의한다. 반면 보편적 인권론에 입각해서 인권에 대한 상대주의적 접근을 무시하는 자유주의적 인권론은 강대국의 패권정치의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이샤이 2005: 47). 인권은 문화적 동질화를 요구하지는 않는다(Donnely 1988: 35). 두 번째로 공동체주의적 관점이 있다. 이 이론은 민족자결권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인권침해의 발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세 번째로 분리독립권은 거의 인정할 수 없지만 분리독립에 미치지 않는 형태의 자기결정권은 국가가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 절충적 관점이 있다.

요컨대 종족정치의 갈등 해결은 제도화된 민주주의가 모든 인민들에게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주는 보편적 규범을 실행에 옮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Diamond 1999: 5). 민족문제의 해결 역시 지역주의문제와 마찬가지로 각 개별집단의 욕구를 얼마나 다원주의적으로 수용해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특히 민족·지역주의 문제는 권위주의체제에 의한 강압적인 사회적 평화가 민주화를 계기로 깨지면서 분출하게 된다. 그것은 내재되어 있던 긴장의 표출이자, 일종의 ‘자유화의 비용’이다(이와사키 2002: 261). 이렇듯 신생민주주의는 민족통합과 종족다원주의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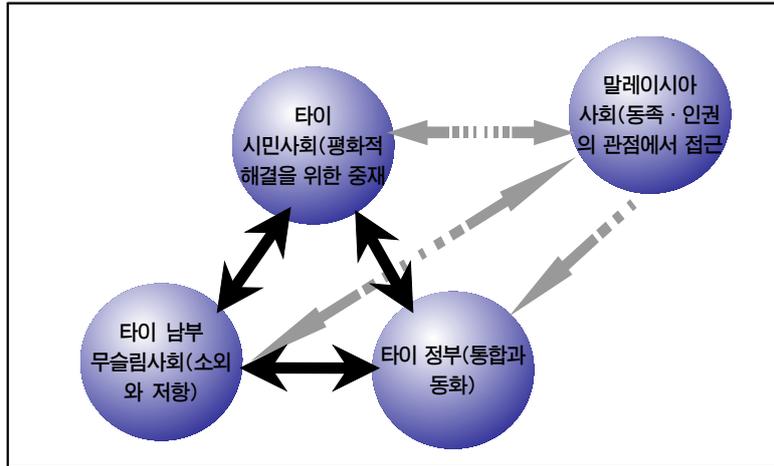
9)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개인주의에 따르면 사회는 개인의 요구와 이해관계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헤이우드 2003: 74).

10) ‘수직적 갈등’(vertical conflict)이란 중앙정부와 특정 소수집단 사이의 갈등을, ‘수평적 갈등’(horizontal conflict)이란 상이한 민족집단간의 갈등을 각각 가리킨다(Sukma 2005: 3).

반면 잭 도넬리(Jack Donnelly)는 집단적 인권 개념을 부정하면서 집단권과 인권이 충돌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인권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프리먼 2005: 165). 특히 커다란 정치적 단위가 작고 깨지기 쉬운 적대적 민족주의국가로 해체되는 것을 의미하는 ‘발칸화’(Balkanization)는 심각한 경제, 정치, 인권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도넬리 2002: 265-266). 마이클 프리먼(Michael Freeman)도 ‘소수자의 권리’(minority rights)라는 용어가 두 가지 다른 권리를 뜻한다고 본다. 하나는 선거권과 같은 소수자 집단 구성원의 개인적 권리이며, 다른 하나는 자민족어로 교육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집단적 권리이다. 전자는 인권원칙에 필수적인 것이겠지만 후자는 인권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테면 공동체 교육권이 여성을 차별할 경우가 그러하다(프리먼 2005: 165).

타이의 경우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민족·종교·국왕’이라는 세 가지 전통적 이데올로기에도 근대 자유주의 이념이 스며들었다. 1980년대 이후로 보여진 신사회운동, 명망 있는 지식인, 국제기구 등의 활약은 개발, 민주주의, 권리와 같은 새로운 담론을 부각시켰다. ‘시민사회’(쁘라차 상콤), ‘촌락주민의 지혜’(품반야 차오 반), 참여민주주의(쁘라차띠빠파이 티미 수언루엄) 등과 같은 개념이 바야흐로 국가기관의 공문서나 기관지의 주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은 좌파와 반동을 아우르는 이데올로기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이때 ‘민족의 힘’(암낫 쁘 샛)은 국가, 민중부문, 주민조직, 기업인, NGO, 학자군 등이 지속가능한 개발, 정치안정, 조화로운 사회질서 등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통해 구성된다(Connors 2003: 322-334).

<그림 1> 타이 남부문제 해결을 위한 타이 시민사회 중심의 관계망



이러한 타이인 중심의 민족주의는 역대정부의 선동적 애국주의에 의해 강화되었다. 왕비는 남부사태와 관련하여 이 지역내 소수자에 해당하는 불교도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였지만 무슬림의 인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Ji 2007: 130).

한편 타이 시민사회가 정부를 압박하여 구성하게 된 국가화해위원회는 위의 <그림 1>과 같은 타이 시민사회 관계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최종적으로 타이 남부문제가 정의와 존중이 결핍된 데에서 비롯되었으며 정부가 조직적으로 인권을 유린하였음을 보고 하였다. 국가화해위원회는 현지 무슬림 주민들에게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반환할 것과 시민사회가 이 지역 정의를 회복시키는데 중심적 역할을 할 것, 그리고 모든 정부 부서에서 타이어와 함께 남부 현지어인 자위어를 공용어로 채택할 것 등과 같은 남부 주민들의 자결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주문은 정부와 왕실 추밀원으로부터 즉각 거부당했다(Ji 2007: 131-132). 이러한 타이 지도층의 보수적 반응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치사회와 끝관만

과 같이 타이 남부주와 접경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주민사회, 그리고 말레이시아 시민사회 역시 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자결권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 <그림 1>의 타이 시민사회의 관계망에서 동족 혹은 인권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사회의 영향력 역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¹⁾

Ⅲ. 타이 남부문제의 기원과 구조: 저항의 역사를 중심으로

타이 무슬림은 전 인구의 90% 이상이 불교도인 타이 사회에서 소수자이다. 무슬림 인구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무슬림은 타이 남단에 속하는 나라티왓, 팻따니, 알라와 인근 송클라, 시똌에 살고 있다.¹²⁾ 종족 상 말레이계에 속하는 무슬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나라티왓, 팻따니, 알라 3개 지역은 과거 팻따니 왕국의 영토로서 종교적, 문화적으로도 불교도가 주류인 타이사회와 많은 차이가 있다.

타이 남부의 무슬림들은 자신을 ‘멀라유’(Melayu)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때 영어식 표기인 ‘말레이’의 원어인 ‘멀라유’는 그들의 종족, 언어 뿐만 아니라 이슬람과 말레이 문화를 지칭한다. 다시 말해 멀라유인이란 말레이어를 사용하며 이슬람을 믿고 말레이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반면 멀라유인들은 불교를 믿는 타이인들을 ‘시예’(siye)¹³⁾라고 일컫는다(Worawit 2006: 53). 그러나 중앙정부

11) 하지 압둘 하디 아왕 말레이시아 이슬람당 총재의 경우 타이 남부사태를 인종청소로 규정하면서 남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투표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정문태 2005b).

12) 남부 3개 주 총 1백39만 명 가운데 79.3%가 무슬림이고 대부분 자위어(Jawi)를 사용한다. 불교도는 20.1%정도이고 도시, 농촌 지역에 흩어져 있다.

13) ‘시예’란 말레이의 팻따니 방언으로서 싸얌(siam)에서 유래하였고, 남부주에 살고 있는 타이족 불교도인들을 지칭한다.

는 ‘멀라유’라는 용어 대신에 타이 이슬람, 타이 무슬림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강요해왔다.¹⁴⁾

타이 남부문제를 인권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타이 시민사회는 타이 중앙정부가 이 지역 빠따니를 강점한 이래 독립을 향한 무장투쟁과 관료 통치하에서 겪는 부당한 현실을 종식시켜달라는 비폭력 방식의 청원과 요구가 철저하게 좌절됨으로써 남부지역 주민들이 현재까지 협박, 착취, 억압, 국가폭력 등에 시달려왔음에 공감하고 있다. 타이 시민사회는 교육부가 내놓은 역사교재나 학계가 기록해놓은 사건들 속에서 빠져있는 타이 남부지역의 타이 중앙정부에 의한 강점과 차별의 역사, 이 지역 현지인들에 의한 독립과 자결권 확보를 위한 투쟁의 역사를 재조명하였다(Surichai 2006; Chalida et al. 2006; Ji 2007).¹⁵⁾

빠따니는 한때 남중국해를 조망할 수 있는 말레이 반도에 위치한 말레이 술탄이 통치하는 독립국가였다. 북으로는 송클라, 남으로는 끌란판, 서로는 끄다, 동으로는 남중국해가 펼쳐져 있었다. 주민들은 대부분 말레이어를 사용하고 이슬람을 믿었다. 이슬람은 그 자체로 법적 체계였다. 이슬람법에 따라 빠따니는 무슬림의 소유였고 이슬람주의 집합이었다. 빠따니는 한때 동-서로 경제와 교육의 중심지로 명성을 날렸으나 라따나꼬신왕조 초기(라마 2세-3세, 1782-)에 정복되었다. 현지 왕족들과 귀족들은 종종 싸암 왕조(현재의 타이)에 반

14) 반면 국가화해위원회는 타이 남단 무슬림에 대한 호칭을 둘러싼 토론 끝에 ‘말레이계 타이 무슬림’으로 명명하기로 결론을 내렸다(McCargo 2007: ix).

15) 2004년 이후 타이 남부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일부 타이 시민사회 조직들이 1970년대 중반 이후 타이 남부 무슬림의 차별과 저항의 역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 중 국제분쟁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타이 남부관련 보고서도 비교적 공정하게 기술된 것으로 타이 시민사회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타이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지식인 중의 한 사람이며 국가화해위원회 위원이었던 쫘라롱껀대학의 수리차이 교수도 타이 남부 역사와 관련하여 방콕-이유타야의 관점에서 가리워진 빠따니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Surichai 2006).

란을 일으켰다. 이에 방콕왕조는 뻗따니를 분할지배하기 위해 이 지역을 7개 행정구역으로 분할했다. 라마 5세(재위 기간 1868-1910) 통치시기에 민족국가 개념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종족, 언어, 종교 등의 측면에서 소수자가 된 이 지역주민들은 종종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받았다. 마침내 1902년 방콕왕조는 뻗따니를 병합, 방콕의 직접 통치하에 두었다. 1909년에는 영국-싸얌 조약에 따라 영국은 싸얌 왕조로부터 말레이 반도 북부에 위치한 이슬람 4개 주 끄다, 빼를리스, 끌란판, 뜨렝가누를 할양받았다.

1932년 입헌혁명 이후 피분정부가 국수주의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뻗따니 주민과 중앙정부간의 갈등은 고조되었다. 당시 군 출신의 피분 송크람(1기 통치기간 1939-44) 수상은 취임 다음 해인 1939년에 국명을 민족적 색채를 강하게 띠는 타이로 바꾸는가 하면 중부 타이어를 표준어로 규정하고 북부, 동북부, 남부 타이어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또 국가문화령을 통해 문화를 사회번영, 질서, 국민통합, 발전, 인민의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적절한 의복차림이나 치장에 해당하는 사안까지 공시하였다(Reynolds 1991: 7). 특히 ‘타이민족의 정체성’(에까락타이), ‘국가주의’(랏타니움)가 강조되는 맥락에서 타이 남부 3개 지역으로의 타이 불교도들의 이주를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이어 학습 및 구사, 서구식 복장과 포크, 수저 사용 등이 강요되었다(Surin 1987: 87).

이렇듯 위로부터의 동화정책이 강압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속에서 비폭력을 주장하던 뻗따니지역 이슬람위원회 의장 하지 쉐롱과 당시 의원이었던 싸맛이 정부에 다시 탄원하였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압둘 까디르 까말 루딘의 그것과 유사하였다. 핵심적 내용은 말레이 정체성과 이슬람법(Sharia)의 집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말레이 무슬림의 통치를 허용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1954년 하지 쉐롱은 익사한 채 발견되었고 싸맛 역시 암살되었다.

1947년에는 알라, 나라티왓, 팻따니 3개주의 성인 인구 절반가량이 서명에 참여하여 유엔에 이 지역을 새로운 말라야연방에 편입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Suhrke 1970: 24; McCargo 2004: 24에서 재인용). 일부 무슬림 지도자들은 그들 공동체를 대변하기 위해 의회에 진출하였다. 1954년 당시 무슬림 출신 의원은 총 5명이었다. 하지 쭈롱의 아들인 아민 또미나 역시 의회정치에 참여한 인물 중의 한 명이었다. 그 역시 남부 무슬림지역의 자치를 추구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종교의 자유, 종교기관 주관하의 자캣(zakat)¹⁶⁾징수, 공식 언어로 타이-말레이어 채택, 지역행정기구내 말레이 무슬림-타이 불교도 공무원 비율을 80:20으로 재조정, 남부지역을 책임지는 공직에 무슬림 임명 등 자치와 관련된 사항들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아민 또미나와 그의 동료 압둘 나 사이부리는 분리독립을 선했다는 죄목으로 4년간 구금되었다. 이로써 자치를 향한 의회주의 노선은 폭력적 방식으로 전환하였다(Surin 1987: 88-89).

1960년대 후반까지 남부에서는 60개의 무장집단이 활동하였다. 일부는 정치적 집단, 다른 일부는 범죄집단, 그리고 나머지는 혼합된 성격의 집단이다. 정치적 집단으로는 무슬림 분리주의운동세력, 타이 공산주의세력(CPT, Communist Party of Thailand), 말레이시아 공산주의세력(MCP, Malayan Communist Party) 등이 있었다. 가장 먼저 결성된 분리주의 무장조직은 민족팻따니해방전선(BNPP, Barisan Nasional Pember-Basan Pattani)이었다. 이들의 목표는 완전독립에 있었다. BNPP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이슬람회의기구(OIC, Organis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아랍연맹 등과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음으로 1960년대 초에 등장한 민족혁명전선(BRN, Barisan Revolusi Nasional)이 있었다. BRN은 게릴라 활동보다

16) 자캣(zakat)이란 이슬람 5대 의무 중의 하나로 금전적으로 소득의 일부를 사회에 희사하는 것을 뜻한다.

는 종교학교를 중심으로 정치조직화에 주력하였다. BRN은 1960년대-70년대에는 말레이시아 공산당, 타이 공산당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

다음으로 1968년에 출현한 팻따니통일해방조직(PULO, Pattani United Liberation Organization)이 있다. PULO는 이후 20년 가량 최대규모의 가장 강력한 분리주의 운동조직이 되었다. 이 조직의 공식 이데올로기는 ‘종교·종족·조국·인도주의’였다. 이들의 목표는 독립 이슬람국가 수립에 있었으나 이슬람적 성격보다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더 강했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5: 6-9). PULO는 옛 팻따니 국가가 불법적으로 타이에 병합되었다고 보고 알라, 나라티왓, 송클라, 살라, 팻따니 5개 남부주의 타이로부터의 분리독립을 통한 팻따니 말레이공화국의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Gunaratna et al. 2005: 170-171). 이 PULO에는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이집트 등 이슬람권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가입하였다. 이들 분리주의자들은 의회에 진출한 무슬림 정치인들을 배반자로, 반면 친정부 무슬림들은 분리주의자들을 관념적 과격파로 각각 간주한다(MacCargo 2004: 25).

1960년대 후반-1970년대에 걸쳐서는 알라, 나라티왓, 팻따니에서 학교를 포함한 경찰서, 정부청사 습격 등 게릴라 활동이 급증하였다. 현지에서의 공안요원과 무슬림 민간인들 사이의 충돌은 1973년 군부정권이 붕괴한 이후 민주화 국면하에서도 계속되었다. 1975년 11월 29일 해병대원들이 나라티왓의 바초라는 지역에서 5명의 무슬림 청년을 살해하였다. 수개월 동안 정부는 어떠한 진상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 분리주의자들에게 부여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주민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빈발하기 시작하였다. 1975년 12월 11일 팻따니에서 7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시위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PULO가 과도한 군사작전에 분노하고 있던 현지인들을 조직한 결과였다. 이 과정에서 과격파 불교도가 시위대에 폭발물을 던져 12명이 죽고

최소 30명이 부상을 입는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이 당시 시위대는 뺏따니 주지사를 무슬림으로 교체할 것, 흉악범을 색출하여 구속시킬 것, 유가족에게 보상조치를 취할 것, 해병대 병력을 이 지역에서 철수시킬 것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크크릿 뿌라못 수상은 이 사태에 뒤늦게 성의 없이 대처하다가 곧바로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1977년 1월 사이빌라(Saibillillah, ‘신의 길’이라는 뜻)라는 조직이 던트르영 공항에 폭탄 공격을 하고, 역과 정부시설까지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적도 있었다. 1977년에는 왕실 행사에서 알라에 근거지를 둔 ‘검은 1902년 12월단’(Black December 1902)이 폭발물을 투척하여 5명이 죽고 47명이 부상을 입는 테러 행위도 있었다. 이들은 타이어 교육 중단, 무슬림 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할 것, 이 지역에 무슬림만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것, 실업 구제책 마련, 교육기회 확대, 무슬림에 대한 무력사용 중단 등을 요구하였다. PULO와 BRN도 보다 폭력화하였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5: 9-10).

중앙정부가 남부문제에 대해 대결정책에서 포용정책으로 선회하게 된 계기는 1980년 뿌렘정부의 출범이었다. 뿌렘은 그 자신이 남부 출신인데다가 실제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제 4군에 복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전임 총리들과 달리 현지의 불만과 정체성 정치에 대해 나름대로 이해가 있었다. 그는 집권과 동시에 국민 참여, 경제개발, 수백 명에 이르는 공산주의자들과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사면 등을 핵심사안으로 하는 새로운 전략을 추구하였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5: 11).

1990년대 재민주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당의 지역주의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신여망당이 동북부지역에, 그리고 찻타이당이 중부에 각각 지역기반을 두었듯이 1992년 선거운동 과정에서 민주당 총재 추언 립파이는 자신의 출신 지역인 남부지역의 정서를 동원하였다(McCargo 2004: 30-31). 이후 남부는 민주당의 확고한 지역 기

반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탁신 총리는 2001년 집권과 동시에 민주당의 영향력이 막강한 남부지역에 대한 중앙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¹⁷⁾ 전직 경찰관으로서 탁신은 정치·사회적 문제와 연루된 사안들을 포함해서 어떠한 불안정한 상황도 법과 질서의 문제로 간주하였다. 특히 탁신은 기존의 남부지역 행정체계가 야당세력의 이익에 부합하고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관료사회와 무슬림사회 사이의 소통을 매개해주었던 남부국경지역행정센터 내 공직자들이 왕실이나 민주당에 보다 충성을 바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폐지하였다.¹⁸⁾ 자연히 행정기관과 무슬림 주민 사이의 소통 문제가 발생하였다.

<도표 1> 타이 지방별 소득수준 차이 (1988-2002)

단위:바트(월 소득)

연도	뻏따니	알라	나라티왓	다른 남부지방	전국단위 다른 지방
2002	2,252	2,425	1,755	3,528	3,898
2000	2,165	2,327	1,676	3,089	3,354
1994	1,131	1,591	1,164	2,148	2,193
1988	1,071	1,048	1,533	926	1,066

출처)타이 통계청, Surichai 2006에서 재인용.

- 17) 탁신의 타이락타이당이 500개 의석 중 375개 의석을 휩쓴 2005년 2월 6일 총선에서도 타이락타이당은 남부지역에서 1개 의석만을 얻었고 민주당은 52개 의석을 얻었다. 남부지역은 타이락타이당이 패배한 유일한 지역이 되었다(이동윤 2006).
- 18) 남부국경지역행정센터의 창설 목적은 남부지역에서의 공산반란군 진압에 있었다. 그러나 주로 분리주의운동에 의한 폭력문제를 다루었다. 남부국경지역행정센터는 내무부 관할 하에 있으면서 남부와 방콕을 이어주는 창구 역할을 하면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정치, 사회, 경제, 안보정책을 논의하였다. 남부국경지역행정센터 위원장은 국방차관이었고 고위직에 현지 말레이 무슬림들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실무진의 대다수도 현지 말레이계였다. 비말레이계 실무진들은 언어교육을 받았다. 남부국경지역행정센터는 남부지역내에서 부패 공무원, 무능한 공무원 등에 관한 민원을 받았고,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공직자는 24시간 이내에 전출되었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5: 33-34).

결국 타이 시민사회의 압박의 성과로 2005년에 남부문제 해결을 목표로 설치된 국가화해위원회는 남부문제의 배경 요인을 크게 행위자 수준, 구조적 수준, 문화적 수준에서 분류하였다. 먼저 행위자 수준은 다양한 분리주의 운동세력의 존재를 가리킨다. 그러나 국가화해위원회는 이들 분리주의 운동의 핵심 활동가와 지도자들은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구조적 조건임을 강조했다. 이때의 구조적 요인들이란 법 집행상의 불공정성과 강압성, 그리고 위 <도표 1>이 보여주듯이 다른 지방에 비해 낮은 수준의 소득과 벌어지는 개발 격차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타이 남부 3개주 지방경제의 정체성, 열악한 교육 환경 등이다. 문화적 요인은 타이 남부 주민 대부분의 종교인 이슬람과 그들의 언어인 자위어에 대한 차별과 그들 고유의 역사에 대한 교육기회의 박탈 등이다(Report of National Reconciliation Commission 2006/05/16). 특히 남부지역 공립학교들은 타이 불교도들이 행한 국가통합의 우월성만을 강조하고 팻따니의 역사와 이슬람 가치를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기에 타이 최단 남부주들은 식민지 역사와 같은 2백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보는 일부 시민사회의 시각도 있다(Ji 2007: 129).

IV. 타이 시민사회의 종족 다원주의적 해결의 모색

타이 민중운동 진영을 포함한 타이 시민사회는 남부지역 문제에 대해 그다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산발적, 개별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지 강력한 연대운동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Ji 2007: 130).¹⁹⁾ 그러나

19) 타이 남부 무슬림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형태의 자치를 원하든지 그들에게 자결권을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타이 중앙정부가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방식,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슬람이 얼마나 큰 비중을 갖고 있는지를 무시한 채 국가안보, 경제이익의 관점에서만 현재의 폭력사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보았다(Chalida et al. 2006; Ji 2007). 무슬림 국가들이 마치 국제테러의 배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강대국들의 반테러 전쟁 캠페인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중앙정부는 남부지역내 분리주의자들을 국제테러조직으로 간주하면서 무자비한 차별과 인권유린을 자행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와 군과 경찰은 전통적인 이슬람 교육기관인 뿐독을 테러범 양성소로 간주하였다.²⁰⁾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무슬림 지식인들은 2001년 9월 11일 이후 타이 남부지역 역시 이슬람과 이슬람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신망을 갖고 있는 중동지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신세계질서 수립을 위한 침략의 목표물이 된 것으로 받아들였다(Ahmad 2006: 47). 주류 언론매체들의 왜곡되고 편향된 보도도 현지 무슬림들에 대한 반감과 몰이해를 부추겼다.²¹⁾

시민사회는 남부지역의 문제 해결은 우선 이슬람 종교와 문화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 남부 문제의 근본원인에 대한 여러 좋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정부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오히려 정부는 종종 편견에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 쯔라롱컨대학교 정치학부의 짜이 응파견 교수는 타이 남부 문제에 깊이 관여한 조직들로 야간대학, 빈곤의회, 뿌라차타이 웹사이트 신문, 학생 집단, 민중연대당 등을 들고 있다(Ji 2007: 130).

20) 19세기와 20세기 초반만 해도 전통적인 이슬람학교인 뿐독에서 마을 주민들은 종교 교육과 도덕적 훈련을 받았다(홍석준 2003: 118). 현지 무슬림들은 뿐독을 학생들에게 순수 이슬람 지식을 제공하며 구루스(gurus)라는 이슬람교사에 의해 운영되는 이슬람과 말레이 문화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뿐독의 특이점은 교육기간의 제한이 없고 수업료도 졸업장도 없다는 점이다.

21) “언론의 자유 없이는 남부 문제의 해결도 없다”는 우본랏 쯔라롱컨대학 신방과 교수의 지적처럼, 실제로 크르 세 모스크 학살 다음날 타이 언론들은 ‘방콕 시민 90%가 무력 진압을 인정한다’는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일제히 내보내며 희생된 무슬림 젊은이들을 ‘폭도’로 만들기에 열을 올렸다(정문태 2005a).

사로잡혀 있고 잘못된 가정을 일삼는 현지 공무원들의 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확실적인 정책이 아닌 종교적 가치와 지성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다. 나아가 인권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타이 시민사회는 평화적 수단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무질서를 조장하는 집단들을 추적하고, 그들의 동기를 알아내고, 그들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등에 관한 방법론에 주목한다.²²⁾

이를 위해서 타이 시민사회는 우선적으로 국가에 의해 조장되는 모든 폭력이 종식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정책은 단지 현지 무슬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공안세력과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대우와 고통을 받고 있는 현지인들 사이에 놓여 있는 불신과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남부지역에서 암약하고 있는 지하경제와 마피아 집단을 소탕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무슬림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과 중동국가들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도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남부문제의 근본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무슬림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탁신정부는 2003년 8월 미국이 주도하는 대 이라크전쟁에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타이 시민사회 가운데에서도 노동자 민주주의 그룹의 경우 현지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들에게 자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그들은 남부 무슬림 주민들이 분리독립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다고 본다. 이들은 남부문제가 민주적 공론의 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억압적인 보안법의 철회, 이 지역으로부터 국가폭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군·경의 철수, 인권유린의 책임자인 군 고위 장교와 경찰간부에 대한 처벌 등이 필수불가결하다

22) 2007년 2월 23일 국가화해위원회 위원이었던 남부지역 내 송클라대학의 위라워트 바루 교수와의 인터뷰에서도 과거파가 실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주장한다. 특히 현지주민의 정체성과 신념을 파괴하는 협애한 민족주의야말로 평화의 걸림돌임을 강조한다(Ji 2007: 132-133).

지난 2006년 6월에는 타이 남부 3개주에서의 정의, 평화, 인권의 신장을 위한 ‘평화를 위한 정의실행그룹’이 발족하였다. 실종된 무슬림 인권번호사 숨차이의 부인인 앙카나가 주축이 된 ‘평화를 위한 정의실행그룹’이 내건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타이 남부에서의 실종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보상, 그리고 책임자 처벌, 둘째로 비상사태령과 형사처벌에 의해 구금된 모든 이들의 권리를 타이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 존중의 차원에서 보호해내는 것, 셋째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재판 과정에서 법치와 공정함이 준수될 수 있도록 구금자와 그 가족들에게 법률 서비스 지원. ‘정의실행그룹’은 2006년 9월 19일 쿠데타를 계기로 타이 남부 지역 내에서 경찰로부터 군으로의 권력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보면서 일단 군사정부가 현지 주민사회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단적인 예로 수상이 직접 딱바이 참사에 대한 사과를 표명하고 비폭력 수단을 통한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의실행그룹’은 수상의 사과 표명이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오히려 이 남부지역 내 소수 불교도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파견된 민병대들의 활동이 거세지고 있고 작전과정에서 군과 경찰간의 충돌이 빚어지면서 무슬림, 불교도할 것 없이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이다(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Justice for Peace 2007/05/01).

타이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국가화해위원회도 최종 보고서에서 현지 무슬림사회의 신념과 권리신장을 보장해줄 수 있는 사면프로그램(amnesty programmes) 추진, 말레이어 사용, 폐지된 남부국경지역행정센터를 대신할 수 있는 현지 무슬림 사회와 시민사회간의 연대 강화, 법치와 공정한 행정 집행 등을 목표로 하게 될 남부지역평

화전략센터 설치 등이 제안하였다. 이 센터의 이사진은 군, 경찰, 내무부, 외교부, 국가안보회의, 기타 필요한 유관 기관 등으로 구성되고, 최소한 이사진의 3분의 1은 남부지역 안팎의 민간부문에서 명망 있는 인사로 채워져야 한다고 보았다(Report of the National Reconciliation Commission 2006/05/16).

이외에도 국가화해위원회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전향적인 관점과 제안을 표명하였다. 첫 번째로, 남부문제는 정의와 존중의 부재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정부는 평화적인 해결방식을 취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보고서는 정부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인권을 유린하였고 비사법적으로 살해했는지를 기술하였다. 보고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부 지역사회에 그들의 천연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시민사회가 정의실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고, 특히 현지어인 자위어를 타이어와 함께 모든 정부부서에서 공용어로 취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화해위원회의 제안은 탁신 수상과 추밀원 의장인 뽀렘 띠술라논에 의해 즉각 거부되었다(Ji 2007: 132).

어떻든 타이 사회에서 이처럼 정체성 정치가 극단적인 분쟁으로 발전하여 국가적 사안이 된 적은 없었다. 또한 과거 분리주의자들의 경우 농촌 등 외진 지역에서 요구사항을 내걸고 정부 측 요원에 테러를 가했다면, 최근의 테러는 도시에서 요구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군·경, 공무원뿐만 아니라 불교도와 무슬림을 가리지 않고 테러를 가하고 있다.²³⁾ 이로 인해 지난 2년간 무슬림 민간인의 사상자 수가 불교도 민간인의 사상자 수를 웃도는 결과를 낳았다.²⁴⁾ 문제는 이

23) 타이 남부 뽀따니 소재 쏹클라대학교 사회학과 왓타나(Wattana Sugunnasil) 교수와의 면담(2006/02/16).

24) 이를테면 2004년 1월 이후 2006년 1월까지 뽀따니의 경우 불교도의 사상자 수가 141명인 반면 무슬림 사상자 수는 330명이었다. 알라의 경우 불교도 99명, 무슬림 222명, 나라티왓의 경우 불교도 237명, 무슬림 1,406명 등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였다(Don 2006). 민간인 무슬림의 사상자 수가 더 많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무슬림 사회

지역에서 정부와 무슬림 사회 사이의 불신이 불교도 민간인과 무슬림 민간인 사이의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특히 불교도 민간인들은 정부요원 뿐만 아니라 승려, 교사, 민간인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테러를 무슬림들의 소행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군과 경찰의 인권유린 행위를 그다지 문제시하지 않는다.²⁵⁾

이 같은 맥락에서 인권의 시각에서 남부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타이 시민사회는 남부 지역 내 다양한 집단들 간의 의견교환, 경험 공유, 상호이해, 지속적인 대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타이 시민사회의 자결권 존중을 토대로 한 종족 다원주의적 접근은 현지 무슬림 지식인들에 의해서도 공감을 얻고 있다. 이를테면 남부지역의 영향력 있는 무슬림 지식인들도 분리보다는 생명과 재산의 보호, 삶의 질, 교육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별 자치’는 고사하고 ‘보통 자치’라도 보장받기를 원한다.²⁶⁾

이외에도 타이 시민사회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같은 주변 국가들 뿐만 아니라 중동국가들과도 민간차원에서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타이와 말레이시아 양국에게 남부문제는 외교적 현안 중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²⁷⁾ 2005년 9월에 131명의 타이 남부지역 무슬림 주민들이 타

내 강-온파 간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슬림으로 위장한 군·경에 의한 민간인 무슬림에 대한 테러로 보는 시각이 있다.

25) 필자가 현지에서 만난 불교도 타이 지식인들은 현 중앙정부가 취하고 있는 무슬림 사회에 대한 접근이 현지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고, 나아가 적절한 조치라고 피력했다. 오히려 이 중 한 명은 정부가 현지 무슬림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익명의 불교도 지식인 두명과의 뱃따니 면담 2006/02/16).

26) 뱃따니 소재 송클라대학교 정치학과 피라웃(무슬림) 교수와의 면담(2004/02/24). 국가화해위원회 현지 무슬림쪽 대표자의 한 사람인 아맛 솜분 위원과의 면담(2006/02/10).

27) 2004년 10월 28일 말레이시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레이시아 전 수상 마하티르는 타이 남부지역의 폭력사태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에 비유하면서 타이가 문제가 되는 이 지역에 ‘자치’(autonomy)를 부여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말레이시아 의회는 딱바이 참사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정부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며 말레이시아로 도피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타이 남부에서 이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이들을 타이로 돌려보낼 의사가 없으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에 난민 지위 여부를 심사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이병도 2005: 174).

주목할 것은 타이 남부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거나 직접 관여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시민사회 내에서 타이 남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에 대해 모두가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분리주의 운동의 현실성에 대해서 공히 회의적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남부 무슬림들에 대한 차별중지와 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존중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생각한다. 특히 말레이시아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타이 남부문제에 대한 말레이시아 시민사회의 접근이 같은 종족, 같은 종교의 맥락에서가 아니라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다.²⁸⁾

V. 결론

타이 남부사태를 계기로 타이 시민사회와 타이 남부 무슬림사회 간의 인권을 매개로 한 소통은 타이 시민사회의 권리 개념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한층 넓혔다. 특히 타이 남부 무슬림 사회와 타이 시민사회는 권리, 특히 자결권 개념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갖게 되면서

28) ‘정의로운 세계를 위한 국제운동’(JUST, International Movement for A Just World) 의장 찬드라 무자파(Chandra Muzaffar) 박사는 종족, 인종, 종교의 차이를 뛰어넘는 국제연대를 강조하면서 말레이시아 무슬림 사회 일각에서 타이 남부문제를 같은 종교, 종족에 대한 ‘형제애’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의 ‘보수성’을 지적하였다(2006/03/01 쿠알라룸푸르 면담). ‘말레이시아 무슬림 청년운동’(ABIM)의 의장 유리 모하마드(Yusri Mohamad) 역시 타이 남부에 지하드(jihad) 행위를 정당화할 객관적 조건은 없다고 본다며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였다(2006/02/23 쿠알라룸푸르 면담).

신뢰의 기초를 다지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타이 근대 국가 수립 과정에서 강조된 세 이념인 ‘민족·종교·국왕’의 보수성을 뛰어넘어 ‘타이 정체성’(에까락 타이)에 대해 보다 열린 접근을 모색하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근대국가의 수립과정에서 타이 중앙정부는 타이인 다움을 ‘민족·종교·국왕’ 세 원리에 대한 충성이라고 정의 내렸다. ‘민족’의 경우 타이어 습득이 그 전제조건이고, ‘종교’의 경우 불교를 의미한다. ‘국왕’은 종교의 수호자이자 민족통합의 구심이다. 하지만 타이 시민사회는 타이 남부지역에서 볼 수 있듯이 타이 사회가 다른 언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다민족사회임을 드러내고 이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역설적이게도 ‘국민헌법’으로까지 불리운 신헌법 하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탁신정부는 이 지역이 반대당의 정치적 기반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동안 있었던 관과 현지 주민간의 소통 채널이 되었던 기구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남부문제가 분쟁 양상으로 치달자 탁신정부는 그 해결 방안으로 현지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역내 경제적, 심리적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개발주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공표하였다. 현지 무슬림 사회 대표자들은 현지인들의 참여 없이 결정된 이 프로젝트의 부적절함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이 프로젝트가 말레이계 주민보다 타이족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줌으로써 지역내 경제적, 심리적 격차를 더 벌이고 무슬림 주민들을 더 소외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지난 10여 년간 뻗따니, 알라, 나라티왓 최단 남부 3개 주의 경제상황은 남부지역의 다른 주에 비해 열악했다. 지역경제가 지나치게 농촌부문에 의존하고 있는데다가, 농촌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20-24세의 미취업 인구 비율이 높다. 타이어 문맹율, 빈곤, 청년실업 등도 사회적 문제이다. 그러나 타이 남부 폭력문제의 근본

적 원인은 이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무시해온, 이른바 ‘내부 식민주의’(internal colonialism)에 준하는 중앙정부의 남부 무슬림지역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그동안 남부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은 폭력과 테러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분리주의운동 혹은 국제 이슬람조직과 연관된 지하드(jihad)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과 남부 무슬림 사회의 차별 구조에 천착하여 정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각이 있었다. 전자는 주로 통합과 동화를 강조해온 정부 측 혹은 주류 언론의 시각이고 후자는 시민사회조직과 대안언론의 시각이다. 국가화해위원회는 이러한 시각차를 줄이고 남부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 쪽에 의해 제안되어 만들어진 정부-시민사회-현지 무슬림 사회 3자로 구성된 독립기구였다.

이 국가화해위원회의 활동은 애초의 기대에 못 미쳤지만 이 위원회에 참여한 시민사회 대표들의 노력으로 타이 사회가 다문화사회, 다민족사회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타이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역량을 보여주었다. 특히 타이 시민사회는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최소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남부지역에 보장해줄 것을 권고하거나 최대 분리 독립의 권한까지 부여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는 남부문제를 바라보는 타이 시민사회의 시각이 ‘동화’(assimilation)와 ‘분리’(separatism)의 중간지점에 해당하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절충적 관점으로부터 소수종족 당사자들이 원한다면 분리독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이르기까지 폭넓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은 자유(잇싸라팍)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낳게 하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현지 무슬림 사회의 지도층 역시 타이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인권의 관점에서 남부문제의 구조를 밝히고 처방을 내린 국가화해위원회의 접근방식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타이 시민사회는 자민족중심주의를 뛰어넘어 다민족민주주의(multiethnic democracy)의 실현과 타이 근대국가 이념의 세 축인 ‘민족·종교·국왕’에 대한 열린 해석의 중심적 역할을 해내었다. 이렇듯 협소한 ‘민족’ 개념을 넘어서서 자기교정(self-correcting)의 역할을 다한 타이 시민사회는 남부문제 해결의 대안을 분리에서 찾지 않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실질적인 자결권을 부여받는 것으로부터 찾고자 하는 현지 무슬림 지도자들과의 신뢰 구축에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약한 수준에서이지만 말레이시아 시민사회와의 소통구조도 만들어내고 있다. 타이 시민사회가 남부문제를 인권 개념을 매개로 현지 무슬림사회, 그리고 말레이시아 시민사회와 이해와 협력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로 삼은 것이다.

그렇지만 타이 남부문제의 해결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2006년 쿠데타 이후 과도 군사정부가 공언한 만큼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처방을 집행하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이 지역에서의 폭력사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쿠데타 이후 타이 시민사회가 분열되고 헌정체제가 복원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남부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더욱 불확실하게 하고 있다. 남부 말레이 무슬림으로 대표되는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관행을 지속시키고, 오히려 악화시키기까지 한 타이 민주주의가 전복된 상황에서 그동안 다민족민주주의의 실현을 추구해온 타이 시민사회의 갈등 해결의 전략이 주목된다.

주제어: 타이남부, 타이 시민사회, 타이남부 무슬림, 소수자, 인권, 샓타(권리), 자결권, 내부식민주의, 다민족민주주의

참고문헌

- 김영애. 2000. “소수종족.” 한국태국학회 편. 『태국의 이해』 서울: 한국외국어대 출판부
- 박은홍. 2004. “지배구조의 자유화, 사회적 신뢰, 민주주의: 인도네시아와 타이의 비교.” 『동남아시아연구』 14(2)
- 이동윤. 2006. “민주화 이후 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한국정치학 회보』 40(5)
- 이병도. 2005. “태국 남부 이슬람지역의 유혈사태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9(4).
- 이사이, 미셸린. 조효제 역. 『세계인권사상사』 서울: 도서출판 길.
- 이와사키 이쿠오. 최은봉 역. 2002. 『아시아 국가와 시민사회』 서울: 을유문화사.
- 정문태. 2005a. “타이남부 무슬림들의 반란.” 『한겨레 21』 2월 22일. <http://h21.hani.co.kr/section-021069000/2005/02/021069000200502220548037.html>
- 정문태. 2005b. “타이남부는 제2의 팔레스타인.” 『한겨레 21』 2월 22일. <http://h21.hani.co.kr/section-021069000/2005/02/021069000200502220548010.html>
- 조흥국. 1994. “태국과 말레이 무슬림 간의 알력에 대한 역사적 고찰.” 『동남아시아연구』 제3호.
- 조흥국. 2004. “태국의 내부 식민주의와 이산(Isan) 정체성에 관한 연구.” 오명석 편. 『동남아의 지역주의와 종족갈등』 서울: 오름.
- 도널리, 잭. 박정원 역. 2002. 『인권과 국제정치』 서울: 오름.
- 프리먼, 마이클. 김철효 역. 2005. 『인권: 이론과 실천』 서울: 아르케.
- 헤이우드, 앤드류. 조현수 역. 2003. 『정치학: 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서울: 성균관대출판부.

- 홍석준. 2003. “말레이 무슬림 정체성의 역동적 성격: 말레이시아 끝판과 태국 빠따니의 말레이사회에 대한 비교연구.” 『동남아시아연구』 13(1).
- Ahmad Somboon Bualuang. 2006. “Three Southern Border Provinces: Globalization Violence Victim.” paper presented at Gwangju International Peace Camp, May 15-18.
- Anwar, Zainah. 2005. “Law-Making in the Name of Islam: Implications for Democratic Governance.” K.S. Nathan, Mohammad Hashim Kamali (eds.) *Islam in Southeast Asia*. Singapore: ISEAS.
- Brown, David. 1994. *The State and Ethnic Politics in Southeast Asi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Carroll, John J. 2004. “Cracks in the Wall of Separation?: The Church, Civil Society, and the State in the Philippines.” Lee Hock Guan (ed.) *Civil Society in Southeast Asia*. Singapore: ISEAS.
- Chailida, Mansor Salae, Noppadol. 2006.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s.” unpublished paper.
- Chaiwat Satha-Anand. 2005. *The Life of This World: Negotiated Muslim Lives in Thai Society*. Singapore: Marshall Cavendish Academic.
- Connors, Michael Kelly. 2003. “The Reforming State: Security, Development and Culture in Democratic Times.” Ji Giles Ungpakorn (ed.) *Radicalising Thailand*. Bangkok: Institute of Asian Studies Chulalongkorn University.
- Diamond, Larry. 1999. *Developing Democracy: Toward Consolidation*.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 Don Pathan. 2006. “South: From Guerrillas to Terrorists: New Face of Violence.” *The Nation*, Jan 9.
- Donnelly, Jack. 1998. *International Human Rights(second edition)*. Boulder:

Wesrview Press

- Freeman, Michael. 1998. "National Self-Determination, Peace and Human Right." *Peace Review*. 10(2)
- Funston, John. 2006. "Thailand." Greg Fealy and Virginia Hooker (eds.) *Voices of Islam in Southeast Asia*. Singapore: ISEAS.
- Furnivall, John S. 1967. *Netherlands India: A Study of Plural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unaratna, Rohan, Arabinda Acharya and Sabrina Chua. 2005. *Conflict and Terrorism in Southern Thailand*. Singapore: Marshall Cavendish Academic.
-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5. "Southern Thailand: Insurgency, Not Jihad." *Asia Report* No. 98 - 18 May 2005.
- Ji Ungpakorn. 2007. *A Coup for the Rich*. Bangkok: Workers Democracy Publishing.
- Jones, Peter. 1994. *Rights*. London: Macmillan Press.
- Lai Suat Yan. 2004. "Participation of the Women's Movement in Malaysia." Lee Hock Guan (ed.) *Civil Society in Southeast Asia*. Singapore: ISEAS.
- Lewis, David. 2001. "Civil Society in Non-Western Contexts: Reflections on the 'Usefulness' of a Concept." Civil Society Working Paper, October 13.
- Loh, Francis K. W. 2006. "Globalization, Development and Democratiation in Southeast Asia." Francis Loh K. W. and Ojendal Joakim (eds.) *Southeast Asian Responses to Globalization*. Singapore: ISEAS.
- Loh, Francis K. W. and Ojendal Joakim. 2006. "Introduction." Francis Loh K. W. and Ojendal Joakim (eds.) *SoutheastAsian Responses to Globalization*. Singapore: ISEAS.
- MacCargo, Duncan. 2004. "Southern Thai Politics: A Priliminary Overview." Wattana Sugunnasil (ed.) *Dynamic Diversity in Southern Thailand*. Chiang Mai: Silkworm Books.

- MacCargo, Duncan (ed.). 2007. *Rethinking Thailand's Southern Violence*. Singapore: NUS Press.
- Mahmud, Nik Auar Nik. 2006. *The Malays of Patani: The Search for Security and Independence*. Kuala Lumpur: National University.
- Man, W. K. Che. 1990. *Muslim Separatism: The Moros of Southern Philippines and the Malays of Southern Thailand*.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 Reynolds, Craig J. 1991. "Introduction: National Identity and Its Defenders." Craig J. Reynolds (ed.) *National Identity and Its Defenders Thailand, 939-1989*. Chiang Mai: Silkworm Books.
- Suhrke, Astri. 1970. "The Thai Muslims: Some Aspects of Minority Integration." *Pacific Affairs* 43(4).
- Sukma, Rizal. 2005. "Ethnic Conflict in Indonesia: Causes and the Quest for Solution." Kusuma Snitwongse and W. Scott Thompson eds. *Ethnic Conflicts in Southeast Asia*. Singapore: ISEAS.
- Surichai Wun'Gaeo. 2006. "Understanding Violence in Southern Thailand." paper presented at Resource Centre for Asian NGOs of Sung Kong Hoe University, April 14.
- Surin Pitsuwan. 1987. "Elites, Conflicts and Violence: Conditions in the Southern Border Provinces." *Asian Review* vol.1.
- Syukri, Ibrahim. 1985. *History of the Malay Kingdom of Patani*. Chiang Mai: Silkworm Books.
- Thanet Aphornsuvan. 1998. "Slavery and Modernity: Freedom in the Making of Modern Siam." Kelly, David and Anthony Reid (eds.) *Asian Freedoms: The Idea of Freedom in East and Southeast A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awatt Mocarapong. 1972. *History of the Thai Revolution: A Study in Political Behaviour*. Bangkok: Thai Watana Panich Co., Ltd..

Worawit Baru. 2006. "Human Rights in Southernmost of Thailand: Cultural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Gwangju International Peace Camp, May 15-18.

『The Nation』, 『Bangkok Post』

타이 국가인권위원회 남부지역 동향분석자료

타이 국가화해위원회 보고서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Justice for Peace 2007/05/01

Report of the National Reconciliation Commission 2007/05/16

면담자료

아맛 솜분. 전 송클라대학 교수. 국가화해위원회 위원(면담일: 2006/02/10).

왓타나 쭈군나신. 송클라대학 교수(면담일: 2006/02/16)

위라윳 바루. 송클라대학 교수. 국가화해위원회 위원(면담일: 2007/02/23)

유리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무슬림청년운동(ABIM) 대표(면담일: 2006/02/23).

찬드라 무자파. 정의로운 세계를 위한 국제운동(JUST) 대표(면담일: 2006/03/01).

피라우트 라힘몰라. 송클라대학 교수. (면담일: 2004/02/24).

기타 익명의 면담자들.

Abstract

Thai Civil Society Response to the Troubles in Southern Thailand: A Human Rights Perspective

Park Eun Hong

(Faculty of Social Science, Sungkonghoe University)

Traditionally, *sitthi*(right)was regarded as the privilege of the king to rule over his subjects, deriving from his justification to protect order for the common good, and 'authority' and 'success' sometimes.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is traditional recognition of rights restricted to the upper class was challenged by the emerging working and bourgeois classes. The 1932 constitutional revolution, which ended the absolute monarchy, made them claim their rights as citizens clearer. Since the 1980s, the definition of *sitthi* was expanded to include 'power to perform legally accepted things freely'.

This study will show what the origin and structure of southern Thailand's current unrest is like and how Thai civil society response such as multiethnic approach to Thai society came to be formed as an outcome of political liberalism spread. This implies that Thai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ve grown to accomodate marginal voices of Malay muslims in southern Thailand. They recognize that Thai society is not monolithic and minorities do have voices. Furthermore they try to go beyond the three pillars of the Thai nationhood: Nation, Religion and King.

In sum Thai civil society gained a momentum from southern Thailand's affair for widening the epistemic horizon to human rights towards multiethnic democracy and right to self-determination beyond narrow approach to the nation and so-called 'internal colonialism' while communicating with leaders of Thai Muslim south and even Malaysian society. However we cannot anticipate optimistically that troubles in the deep south will be addressed easily because of fragmented Thai civil society and lacking of real intention of military government for solving after 2006 Thai coup.

Key words: southern Thailand, Thai civil society, Thai Muslim south, minority, human rights, sitthi(rihgt),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ternal colonialism, multiethnic democracy